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기홍(원쪽) 도의회 부의장·최재민(원주) 도의원	1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
강원도민일보	03면	대선·지선 이은 '최종 승부' 여야 물러설 곳 없는 대결 예고	2
중부뉴스통신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베트남 다낭시 대표단’...	3
케이엠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베트남 다낭시 대표단’...	4
江原日報	03면	김왕규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사직 ‘양구 도의원’ 재선거 열...	5
江原日報	03면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관련법 개정 촉구	6
江原日報	02면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개막	6
강원도민일보	09면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인상적...농업인 이슈 집중 조명을"	7
원주투데이		'농업인의 날' 정부 기념행사 원주에서...[1/2]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정운현·박승남 횡성군의원·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	10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0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원제용(원주) 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장	10
江原日報	05면	김진태 지사 “도건 중단, 업주 각서 받아”	11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내년까지 세수결손 7000억원... 김 지사 "복지예산 유지"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자치경찰 이원화 앞둔 강원, 지역맞춤 치안 서비스 과제	12
江原日報	01면	道, 출연·출자기관 '본격 구조조정' 칼 빼든다	13
江原日報	02면	道, 출연·출자기관 '본격 구조조정' 칼 빼든다	1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 인구절벽 위기 시·군 연대 해법 모색	14
東亞日報	16A	강원세계산림엑스포 3일 만에 5만 명 찾아	15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국제걷기대회 5년 만에 돌아온다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한중 우호 협력 본격화 기회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자원순환세' 법제화 실효거둬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긴 추석 연휴, 복지 사각지대·돌봄 공백 없어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전문대학 생존, 과감한 구조조정·특성화에 달려	2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인물동정 11면
기공식에참석한다



김기홍(왼쪽) 도의회
부의장·최재민(원주)
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50분 원주시 부론
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에서 열리는 산업단지

江原日報

2023년 09월 25일 (월)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26일 오후 5시30분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4주년 기념식 및 경축 리셉션에 참석.

김기홍(원주) 도의회 부의장, 최재민(원주) 도의원은 26일 오후 4시50분 원주시 부론면 부론일반산업단지 현장 내에서 열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제8보병사단 전물추모비에서 열리는 제73주기 8사단 전물장병 합동 추도식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제21기 강원지역회의 출범대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26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에서 열리는 2030 산림비전 전략수립 자문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대선·지선 이은 '최종 승부' 여야 물러설 곳 없는 대결 예고

2023년 09월 26일 (화)

특집 03면

총선 관련 포인트

추석연휴를 앞두고 선거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됐다. 추석민심은 22대 총선의 바로미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현행 8개 선거구 유지를 전제로 자선탄천 거론되는 입지자는 40여 명에 달한다. 총선 관련포인트를 짚어본다.

■ '정권 심판' VS '거야 심판' 중도 표심이 승패 가른다

차기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선거다. 지난해 3월 20대 대선에 이어 같은 해 6월엔 8회 지방선거를 치른 가운데 최종 승부는 22대 총선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국

정치권 대립 속 중도층 구애전 출마·영입설 무성 선거판 변수

현역 다선고지 성공 여부 관심 보수야성 확인 vs 승리저력 재현

민의힘은 '거야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앞세우며 추석민심 여론몰이에 나섰다.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중간 평가하게 될 것과 동시에 여소야대 구도에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을 평가하는 자리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원 민심향배가 특히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 속에 중도층을 겨냥한 구애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 강원정치1번지, 춘천 선거구 변동 있을까...원주 새 얼굴 등장하나

춘천은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춘천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로 분할됐다. 철원·화천·양구와 춘천 북부 6개 읍면동이 을 선거구에 속해있다. 춘천은 지난 1월 기준, 선거구 확정 인구 상한선 기준을 초과해 분구 요건을 충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위는 최근 춘천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나 현행 구도 속에서는 분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춘천 후보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각자의 길을 택해 갑·을로 갈라섰다. 국민의힘의 경우 춘천갑·을 모두 안민인과 경제인, 법조인 등 '새얼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문순 전지사가 여

전히 히든카드다.

원주을선거구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에 맞설 후보로 국민의힘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까지 영두에 두고 있다. 이들이 선거판에 등장하면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 '3연승' vs '연패 설욕'

대선과 지선에서 연승을 거둔 도내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통한 '3연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내 민주당은 설욕을 버리며 민주당원 결집으로 맞섰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18개 시·군 전역에서 모두 승리, 54.18% (54만 4980표)를 얻었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약 3개월 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도내 여권은 도지사부터 해 14개 시·군·구 선거를 석권했다. 지방의원 선거까지 합산하면 보수의 아성 재건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은 5선에 도전하며 한기호 의원은 4선, 이철규·이양수 의원은 각각 3선에 도전한다. 이들의 다선고지 성공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맞서 도내 민주당은 '연패 설욕'을 다짐하며 조직재정비 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도내 민주당은 2017년 대선 승리와 진보전열 첫 3선 도지사 배출 및 기초단체장 11석 석권, 21대 총선 당시 원주갑·을 선거구 승리 저력을 차기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세훈·이철화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53·민 국회의원	노용호 52·국 국회의원	강대규 39·국 변호사	김혜란 47·국 도당 법률전문 위원	박영준 59·국 협회 부회장	최성현 57·국 전 춘천시장 후보	김창수 64·민 남북강원주민 연대 대표
--------------------	---------------------	--------------------	------------------------------	-----------------------	--------------------------	--------------------------------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71·국 국회의원	이민찬 39·국 국민의힘 상근부대인	허인구 64·국 전 G1 방송 사장	유정배 58·민 전 대우건설공사 사장	전성 64·민 지역위원장	최문순 67·민 전 강원도지사
---------------------	------------------------------	---------------------------	-------------------------------	---------------------	------------------------

강릉



권성동 62·국 국회의원	김우영 53·민 강원특별자치 도당위원장	임명희 41·사회민주당 (2월 8일 관동)
---------------------	--------------------------------	-------------------------------

원주갑



박정하 57·국 국회의원	원창목 63·민 전 원주시장	여준성 52·민 전 대통령 사화정책비서관	최석 43·민 (주)지니건설 대표	최혁진 52·민 전 청와대 비서관
---------------------	-----------------------	---------------------------------	-----------------------------	-----------------------------

원주을



송기현 59·민 국회의원	권이중 51·국 변호사	김기홍 46·국 도의원	박동수 64·국 변호사	안재윤 57·국 미래교육카데미 대표
---------------------	--------------------	--------------------	--------------------	------------------------------



윤용호 67·국 민주평등문화의 원주시협의회장	장승호 53·국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65·국 전 원주시의원	최재민 40·국 도의원	박성원 58·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	--------------------------------	------------------------	--------------------	-------------------------------



김승호 60·무 인사혁신처장	김완섭 55·무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미란 40·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	--------------------------------

■ 21대 총선 결과(1·2위 후보만 기재)

선거구	후보(정당)	득표율	후보(정당)	득표율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허영(더불어민주당)	51.32%	김진태(미래통합당)	43.93%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정만호(더불어민주당)	46.35%	한기호(미래통합당)	52.07%
원 주 갑	이광재(더불어민주당)	48.56%	박정하(미래통합당)	41.13%
원 주 을	송기현(더불어민주당)	53.88%	이강후(미래통합당)	43.18%
강 룡	김경수(더불어민주당)	38.76%	권성동(무소속)	40.84%
동해·태백·삼척·정선	김동원(더불어민주당)	43.06%	이철규(미래통합당)	53.60%
속초·인제·고성·양양	이동기(더불어민주당)	44.19%	이양수(미래통합당)	52.56%
홍천·횡성·영월·평창	원정환(더불어민주당)	38.40%	유상범(미래통합당)	48.59%

■ 20대 대선, 도내 득표수·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합계(득표수)	419,644	544,980	16,297	10,846	10,103	21,713	7,433	7,343	8,937	18,418	12,557	10,758	11,463	6,445	5,689	11,039
(득표율, %)	41.72	54.98	37.71	40.41	40.95	41.70	39.12	37.55	41.59	39.83	38.82	40.33	39.36	39.62	39.74	40.23
춘천시	82,376	94,926	44.51	51.29												
원주시	100,954	113,560	45.02	50.65												
강릉시	54,377	80,482	38.72	57.31												
동해시	22,896	31,739	40.19	55.71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56·국 국회의원	김규환 67·국 전 국회의원	홍병천 64·국 전 농업중앙회 감사위원장	허필홍 58·민 전 홍천군수	박성규 65·무 전 영월군수
---------------------	-----------------------	---------------------------------	-----------------------	-----------------------

◇기재순=현역-정당-가나 다순(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적용)
◇정당(국=국민의힘, 민=더불어민주당, 무=무소속)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65·국 국회의원	김양호 61·민 전 삼척시장	한호연 65·민 지역위원장
---------------------	-----------------------	----------------------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 55·국 국회의원	김도균 56·민 전수도병위시행관	박상진 55·민 지역위원장
---------------------	-------------------------	----------------------



2023년 09월 25일 (월)

중부뉴스통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베트남 다
낭시 대표단’간담회

관광지방의회 분야 업무협약,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 행보 추진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부의장과 사회문화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4시에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과 지방의회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을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도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지방의회의 우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다낭시의회 Tran Phuoc Son 부의장을 비롯해 12명의 다낭시 대표단이 참석한다.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강원관광재단과 관광 업무협약을 하고 관광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뒤, 이후 오후 4시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사회문화위원회와의 관광 및 지방의회 분야 업무협약 간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부의장이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을 환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다낭시 간 적극적인 교류를 당부한다.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자치도-다낭시 간 직항노선 개설, 연령대별 타깃 관광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우수제도를 적극 논의해 질적으로 발전하는 강원자치도와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2023년 09월 25일 (월)

케이엠뉴스

경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문화위원회”-‘베트남 다
낭시 대표단’간담회

관광지방의회 분야 업무협약,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 행보 추진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부의장과 사회문화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4시에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과 지방의회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을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도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지방의회의 우수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베트남 다낭시의회 Tran Phuoc Son 부의장을 비롯해 12명의 다낭시 대표단이 참석한다.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강원관광재단과 관광 업무협의를 하고 관광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뒤, 이후 오후 4시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사회문화위원회와의 관광 및 지방의회 분야 업무협약의 간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부의장이 베트남 다낭시 대표단을 환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다낭시 간 적극적인 교류를 당부한다.

정재웅 위원장은 “강원자치도-다낭시 간 직항노선 개설, 연령대별 타깃 관광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우수제도를 적극 논의해 질적으로 발전하는 강원자치도와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엔사이드, 신아일보 등 5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3면

김왕규 강원테크노파크 단장 사직 ‘양구 도의원’ 재선거 열기 들썩

“고향 위한 일에 힘 쏟겠다”
추석 앞두고 후보군 윤곽

속보=‘양구 강원자치도의원’ 재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김왕규(60)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사직서를 제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기찬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지난 7월 도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양구군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본보 7월25일자 3면 보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양구부군수를 역임한 김왕규 단장은 지난 25일 오후 강원테크노파크에 사직서를 제출, 도의원 재선거 출마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주변의 의견과 제 자신의 판단을 종합해 출마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며 “고향인 양구로 돌아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을 위한 일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출마 후보자로는 자전타전 5명이 거론

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단장을 비롯해 김연성(37) 도당 청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규호(60) 전 도의원, 곽원일(61) 도당 부위원장 등이다. 여기에 무소속인 신철우(52) 양구군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거론됐던 유승철 양구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당원들에게 불출마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김철 전 양구군의회장은 주위에 뜻이 없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후보군은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들어간 반면 다른 후보군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연성 부위원장은 “지역 정가 분위기를 살피며 고심 중”이라고 했고, 신철우 군의원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아직은 직분에 충실하려 한다”고 했다. 여기에 직을 내려놓은 김왕규 단장이 양구에서 활발한 움직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대결구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양구 도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현정기자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3면

江原日報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관련법 개정 촉구

권성동·박정하·허영의원 면담 “입증책임 제조사가 지게 해야”

속보=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25일 국회를 찾아 올해 내 관련 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본보 2월23일자 5면 보도)했다.

이날 고(故)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와 강릉의 김용래 강원자치도 의원, 급발진 재판 담당 변호사 등은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4선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정하(원

주갑)·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운전자보다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여당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위원회에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토위 소속인 박정하·허영 의원도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 흥제동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며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가 숨졌다. 현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2면

江原日報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개막 오대산 월정사 특별전 개막식이 25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정년 월정사 주지스님,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재열 국립춘천박물관장, 박용수 국립춘천박물관관장, 도후 청평사 주지스님, 해운 월정사 성보박물관장, 지현병 강원고고문화위원장, 권은석 춘천문화위원장, 임근우 강원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21면

김남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기획 09면



“정책 실효성 의문 제기 인상적...농업인 이슈 집중 조명을”

강원도민일보 2023년 독자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9일 강원도민일보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지 독자위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행까지 남은 과제를 면밀히 살펴 이슈를 모으는 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독자위원들은 지역 내 인구 이동, 여성농업인 권익, 공공의료 인프라, 전국 이슈의 지역화 등도 주문했다.

김현숙 강원대 명예교수·작가(독자위원장) 예술가들은 무대에 서기 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한다. 신문제작 역시 사실관계 확인과 오타 수정 등 매일을 무대에 서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지난 회의 때 성공출범을 위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벌써 출범 3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더 많다. 모두 잘 해내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하기’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독자위원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늘 공유해 달라.

강정호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3번 개정됐다. 처음에는 명칭을 잡는 정도였는데 지난 6월 전막을 잘 짜서 정부와 협의하고 전 도민이 협력하면서 기반을 잡았다. 진짜 중요한 시기는 이제부터다.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이 이어져야 한다. 허울뿐인 특별법이 되지 않으려면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과 도민들께서 기존 노력을 넘어 더 많은 의견을 주셔야 한다. 농업농업에서 여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태에서 관련 정책을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다. 여성농업인 지원법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원은 커녕 관심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여성농업인 권익에 대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최근 유가가 빠르게 오르는 추세를 그래픽으로 보여준 것이 좋았다. 가시적으로 흐름을 잘 추적한 것이 었 보였다. 도민일보를 온라인으로 보는 편인데 주말이 다가오면 이번 주말 어디갈지 찾아본다. 지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축제 소개, 노포기사 등이 굉장히 유익했다. 요즘 언론들이 제목과 기사를 세게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낯선 길’이 심한 분위기 속에 도민일보는 상대적으로

강특법 조례 제정 과제 후속 보도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관심 필요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모범사례 등

유가 상승세 흐름 그래픽 눈에 띄어

지자체 노포 시리즈 기획 유익 ‘호평’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중단’ 보도 눈길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대책 제시

외국인노동자·탄소중립 다뤄주길

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결과요, 말줄임표의 내용이 보인다. 예를 들어 외신을 인용한 김정은과 푸틴 회담, 불특정 시민의 말도 다음 표에 넣어 쓰고 있다. 신문은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학습도구이기도 하다. 예전과 (기사) 문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시민 여성폭력, 외국인, 젠더이슈 관련 중심으로 주로 보는데 지난 8월 3일 ‘국비폭력·성폭력상담소 중단’ 보도는 강원도민일보만 다뤘다. 특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상담소는 춘천의 유일한 여성폭력상담소다. 향우대안 등에 대한 후속기사도 이어지면 좋겠다. 9월 13일자 한국여성수련원장 청문회 보도에서 다뤄진 젠더이슈를 보면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젠더 관련 의식이 많이 낮다는 것을 느낀다. 더 많이 조명해 달라. 최근 전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유일한 전문 상담소인데 대안이 있는지, 관련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넘긴다는 데 일요일에만 시간이 나는 외국인 상담 수요를 어떻게 소화할지 의문이다. 관련 문제를 집중 보도해 달라.

함영이 작가

최근 황성의 한 학교 동문회장에 여성이 임명됐다는 보도가 가장 인상 깊었다. 동문회장은 3D라

고 할 정도로 책임이 무겁고 어려운 자리이므로 의미가 크게 놓치지 않고 보도했다는 의미가 컸다. 여성농업인 임금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사례 중에도 황성이 있다. 이 사례도 다루면 좋지 않을까 한다. 최근 보도 사진 중 하늘 풍경을 포착한 ‘천국의 문’이 화제였는데 독자 제보를 적극 보도해 인상 깊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현지에 가서 모범사례를 직접 보여준 것도 높이 평가한다. 최근 영동인구가 영서로 이동하는 현상도 주목해 볼 만하다. 자칫 18개 시·군 내 갈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 관련 처방을 선제적으로 해달라. 기자와 신문은 결국 브랜드가 되어 유지된다. 현장에서 실수하면 가치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김택우 도의사회장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화두가 떠오른 지 1년 이상 지난 듯하다. 정부가 TF를 구성해 요란을 떨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필수요리를 기피하는 MZ세대의 미래선택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삶의 질, 삶과 일의 균형감 등을 중시하는 세대다. 왜 필수 의료인이 이탈하는지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내면 된다. 강원 영동지역은 심장내과교수가 이탈해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도와 지자체가 합심해 의료진 채용을 개선하고 정착을 도와야 한다. 영서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요건 강화보다는 지정되는데 힘 쏟아야 한다. 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경영이 어려워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이들을 포함한 필수의료 문제를 계속 내 이탈의료진 (필수과·교수)에 대한 대책을 계속 다뤄주었으면 한다. 시간이 더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연재도 좋을 듯하다.

김진영 춘천 청년 커뮤니티 춘뿌리 대표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준다.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 많은 사고의 기회를 주는 매체다. 최근 읽은 기사 중 경찰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룬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정부 등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실효성, 윤리적 측면, 사회적 영향 등을 지역차원에서 함께 다뤄주면 해당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지역 독자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필요한 시점의 사회적 논의 촉진, 개선을 위한 대화 유도에 기여한다. 지역 내 사건이나 행사 외에도 이슈 제기와 비판적 시각의 기사가 많아질수록 독자의 관심을 끌 것이다.

김형숙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장

농업인에도 다양한 성별과 세대가 있다. 기존의 고령농업인은 물론 MZ세대, 여성농업인 등 농업 계도 다양한 카테고리이고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강원도의 미래농업이 나아갈 길도 함께 찾아야 한다. 현재도 내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탄소 중립과 안전수칙 준수 활동 등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행정과 민간 등도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 강원특자도 법안 시행 전까지 농업분야를 다시 다듬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먼저 대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언론이 이슈 제기와 대안 마련의 역할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다.

송정목 편집국장

특별자치도 출범 당일 주말 특별호까지 발행하며 이슈를 쫓았다. 출범 이후에는 일본·프랑스·스위스 전문가들과 국제심포지엄도 했다. 지역에 책임감 넘쳐오는 부분이 과제로 남았다. 다음 달부터 국회와 지역소화학회 등 특별자치도 후속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친화적인 지면, 예를 들어 지난 해 배드민턴대회가 노포시리즈, 소양강댐, 폐광지 등을 기획했다. 최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컨퍼런스 공모를 통해 소양강댐, 폐광지역 시리즈도 공모를 통과했다. 영상 등과도 협업해 뉴스 제작 방식을 다양하게 넓혀겠다. 기사 제목과 작명은 실제 바뀌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보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기사 가치 판단 등 기자들의 생각 회로도 바뀌고 있다. 낯선 기사를 되도록 자세히 읽고 있지만 기사 주목도 등을 높이는 방안 등은 상식선에서 해결하겠다. 젠더이슈는 관심 갖고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드리겠다. 농업이슈도 외국인노동자, 귀농귀촌, 첨단산업화 등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관련 이슈도 보완해 나가겠다. 공공의료 문제의 경우 향후 6000개 병상이 수도권에 생기는 데 의료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보겠다. 지적사항은 지면에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다. 정리/김민정·강주영



김현숙

강정호

이기대

탁운순

함영이

김택우

김진영

김형숙

원주투데이

2023년 09월 25일 (월)

강원

'농업인의 날' 정부 기념행사 원주에서...

'농업인의 날'은 원주에서 시작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다른 지역에서 개최...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원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농업인의 날'에 대한 제언

강원도라는 지명이 정해진지 628년 만인 올 6월 11일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의 역사적인 출범이 있었습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와 특례 이양으로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성장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늘 변방에 위치한 죄로 중앙을 위해 양보하거나 끌려가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의 통제와 종속으로부터 특별자치도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원의 힘을 보여줄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농업인의 날'이 삼십여 년 뒤에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1996년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김영삼 대통령의 축사로 치룬지 올해로 제28회가 됩니다. 매년 열리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농업인 등 유공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가 경영안정, 미래성장 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 등을 격려하기 위한 전국 최고 농업인 축제의 장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11월 11일 제28회 '농업인의 날'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4년 우리 지역의 농촌계몽운동가 원흥기 선생의 제안에 의해,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밟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 '土' 자가 겹친 '토(土)월 토(土)일' 토(土)시, 즉 11월 11일 11시에 현 농촌지도자연합회 원주시지부인 그 당시 농사개량구락부 원성군연합회에서 '농업인의 날'로 삼아 전국 최초로 기념행사를 시작한 이래로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준공한 후 수원에 국영시범농장을 설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국가기념일인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늘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수원에서 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의 농촌진흥청이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부터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세종시의 세종호수공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 등으로 행사장이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최근인 2020년 제25회에는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2021년 제26회에는 세종컨벤션센터, 지난해인 2022년 27회에는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올 2023년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장소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 단구동에 있는 농업인의 날 기념비.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11월 11일이 뼈빠로 데일로 불려지는 데 착안, 가래떡 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법정기념일로서의 '농업인의 날'의 상징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기념행사 장소 또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기념일의 역사적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 놓인 것이 현재 '농업인의 날'의 현주소로 보여져 아쉽기만 합니다. 여기에 더욱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UN이 2007년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제정한 것을 근거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고, 2022년 10월 18일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제는 법정기념일로서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고 10월 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64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꾸준히 기념행사를 치루어 온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 농업인의 날 발상지인 원주에서 국가기념 행사를 매년 개최하게 하여 '농업인의 날' 본연의 상징적 가치와 의미를 고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합쳐 중앙에 요구할 때입니다.

해마다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역사적 당위성이 있는 원주에 유치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지방 분권의 실현과 '수도권 강원시대'의 대표적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1일,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원주에 유치, 200만 강원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500만 농업인의 중심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wonjutoday@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인물동정 12면



박호균 도
의원은 26
일 오후 2
시 한림대
일송아트

홀에서 열리는 민주평
통 제21기 강원지역
회의 출범대회에 참석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인물동정 12면
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인물동정 14면



정운현(왼쪽 위)·박승
남(오른쪽 위) 황성균
의원·엄윤순(인제·왼
쪽 아래) 도의회 농림
수산위 부위원장·오
인철(오른쪽 아래)민
주평통 흥천군협의회
장은 26일 오후 2시 한
림대에서 열리는 민주
평통 강원지역회의 출
범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인물동정 11면



원제용(원
주) 도의
회 한중국
제교류협
회장은 26

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4주년 기념식 경축
리셉션에 참석한다.



심오섭 도
의회 사회
문화위 부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제8보병사단 전
몰추모비에서 열리는
제73주기 8사단 전몰
장병합동 추도식에 참

江原日報

2023년 09월 26일 (화)

사회 05면

김진태 지사 “도견 중단, 업주 각서 받아”

춘천 불법도축 의혹

속보=불법 도축 행위와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된 춘천의 도견장 업주(본보 지난 5일자 5면 등 보도)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견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도축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학곡리 A 도견장의 업주로부터 최근 도견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며 “업주 측에서 변화된 사회환경과 불법 도축

을 우려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의 도견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춘천의 도견장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대규모 불시 점검을 진행, 불법 도축과 동물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불법 도축과 동물 학대 문제를 척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2면

도 내년까지 세수결손 7000억원… 김 지사 “복지예산 유지”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불가피
지방채 발행 등 세수확충안 검토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 ‘먹구름’

속보=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핑크’ 상황(본지 9월 19일자 1면 등)을 맞은 가운데 올해와 내년도 강원도 지방세수 결손 규모가 7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불요불급 사업은 구조조정하되,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복지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올해 지방세 결손이 4000억원(전망)됐다”며 “올해 정리 추경에서 지출을 조정해(지방세수) 결손분을 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세수 추계와

관련해선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지방세 추계를 하고 불요불급 사업은 지속 구조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강원도는 올해 지방세가 총 2조 2645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세 감소 영향에 따른 것이다. 당장, 4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강원도는 사업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재정안정화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기금 활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이 지방세수 확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신속집행 기조로 상반기에 이미 많은 사업이 진행돼 기존 사업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 규모가) 부족하면(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기준, 강원도 예산(일반회계 7조 4813억원) 집행률은 76.89%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년도 지방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 도에 따르면 내

년도 강원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지방세(2조 463억원)·지방교부세(1조 2645억원)세입안 대비 3119억원(지방세 1600억~1700억 원·지방교부금 1400억원 이상)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내년도 강원도 복지 예산은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복지 예산은 2조 6923억원 규모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4면

자치경찰 이원화 앞둔 강원, 지역맞춤 치안 서비스 과제

내년부터 이원화 시범 실시
권한 이양·예산 확보 등 시급
“자치경찰 독립 업무 수행 한계
관련기관 협력 제도 안정 도모”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장에 조명수 전 행정부지사가 내정, 자치경찰 위원회도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원화 모델 시범 지역인 강원도가 조직 분리 문제와 예산, 또 지역 주민들이 제갈할 수 있는 치안 서

비스 제공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해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전북과 제주, 세종과 함께 자치경찰 이원화가 시범 실시된다. 하지만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이 잡히지 않았다. 강원도자치경찰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강원

도내 경찰 인력 절반 가량인 지구대·파출소 경찰(1900여명)이 관은 물론 자치경찰 사무 전부 이관·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 이관·지구대, 파출소 경찰 이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견 수렴만 진행됐을 뿐 별도의 권고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력을 자치경찰로 옮기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로 현장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선 현장을 뛰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에 대한 지역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아직 지구대·파출소의

경찰관들은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이다.

예산 확보도 시급하다. 현재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은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자경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범직급과 과태료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시켜달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구와 의견제시만 무성할 뿐 당장 내년 시범 시행이 예정됐음에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속적으

로 의견제시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별도로 언급할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와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그릇에 담겨 있 다 보니 본격적인 자치경찰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으로 여러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훈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1면

江原日報

道, 출연·출자기관 '본격 구조조정' 칼 빼든다

본보 경영 평가 결과 입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관광재단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강원심층수는 경영부실을 의미하는 최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사실상 첫 평가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25일 본보가 입수한 2023년(2022년 실적)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19개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과 강원관광재단이 S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입증했다. 관광재단은 출범 이후 2번의 경영 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았고 인평원 역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한 이후 2년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D등급은 ㈜강원심층수 한 곳이었다.

대백가덕산풍력발전(주), 2018평창기념재단,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

민영화 수순 강원심층수 최하위

처음 평가받은 'GJC'는 C등급

경영 부진 기관들 컨설팅 비롯

조직 정비 등 시행 가능성 높아

발전지원센터, ㈜강원수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경영실적이 미흡한 C등급에 머물렀다. 대백가덕산풍력발전(주)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평가는 한 단계 상승했다.

춘천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그동안 강원자치도의 보유 지분이 50%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경영평가에서 제외됐으며 올해 첫 평가를 받았다. 첫 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서 아직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최고인 S등급을 받은 반면 2018평창기념재단은 C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D등급은 없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면에 계속

2023년 09월 26일 (화)

종합 02면

江原日報

道, 출연·출자기관 '본격 구조조정' 칼 빼든다 -1면에서 계속

지난해 하반기 경영평가는 전임 도정 시절인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가 김진태 도정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첫 성적표로 볼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비 출연금이 지난해 436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컨설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최하등급을 받은 강원심층수와 C등급인 강원수출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 강원문화재단과 도립극단은 통합된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직접 컨설팅, 조직 정비 등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09월 26일 (화)

강원도민일보

종합 01면

강원 인구절벽 위기

시·군 연대 해법 모색

전국 89개 시군구 협의회 출범
이현종 철원군수 부회장 선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논의

인구 절벽 위기 속에 철원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의 공동대응이 본격화됐다. 특히, 지방소멸 지수를 토대로 한 228개 시·군·구 인구 변화 조사에선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고 나머지 8개 지역도 인구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등 지역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등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졌다.

총회 및 출범식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달근 인구특위위원, 이현종 철원군수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협의회장엔 송인현 괴산군수가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문경복 웅진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가 선임됐다. 이현종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별 인구감소 이슈·우수사례 발굴 △지역 중점 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에 나서게 된다.

본지 취재 결과,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곳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지정·고시하고,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화, 지역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강원도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소멸 위기지역이 많은 것으로 집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 감소지역간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세훈

東亞日報

2023년 09월 26일 (화)

충청/강원 16A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3일 만에 5만 명 찾아

22일 개막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첫 주말 동안 5만3000여 명이 몰리면서 흥행 대박을 예고했다. 25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진행 중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22~24일 5만3299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객들은 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등 5개 전시관에서 다채로운 전시물을 관람했고, 43개 체험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엑스포의 랜드마크인 45m 높이의 '솔방울 전망대'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 부행사장인 고성 DMZ박물관, 속초 설악산 자생식물원, 인제 용대관광지, 양양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트레킹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조직위는 앞으로 추석을 포함한 6일 동안의 황금연휴와 단풍철이 이어지면서 산림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조직위는 고성을 찾은 단체 관람객을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하루 1차례 2개 코스의 비무장지대(DMZ) 탐방 투어를 운영한다. 1코스는 통일전망대-DMZ박물관-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이고, 2코스는 왕곡마을-건봉사-냉천리 검문소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다음 달 22일까지 열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풍성한 볼거리가 가득하다"며 "산과 바다 어디로 갈지 고민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산림엑스포장으로 오시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지역 11면

원주국제걷기대회 5년 만에 돌아온다

시-대한걷기연맹 공동개최

내달 28~29일 댄싱공연장 출발

대회 전 27일 타종식·친교의 밤

원주국제걷기대회가 옛 명성을 되찾는다. 원주시와 대한걷기연맹은 오는 10월 28, 29일 이틀간 제29회 원주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국제걷기연맹 인증' 행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원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다.

지난 2018년 대회 이후 시와 연맹이 결별 후 약 5년 만에 다시 함께 하는 것으로, 원강수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대한걷기연맹은 지난 2019년 시와 결별했다. 당시 시가 대회 참가 규모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조직 및 대회 운영 방식 변화 등을 요구했으나 연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 단초가 됐다. 시는 바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수행단체를 선정, 원주치악산국제걷기축제를 개최했다. 이후 원주국제걷기축제로 변경 추진했지

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2년 취소, 2021년에는 축소 운영됐다. 다행히 올해 양측이 다시 손을 맞잡고 최근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최근 시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트레킹 도시'를 선포하면서 이번 대회가 이를 대내외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는 10월 27일 치악종각에서 대회 성공과 참가자 안녕을 기원하는 '평화건강 타종식',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국제우호증진을 위한 '국제친교의 밤 행사'로 시작한다.

참가자는 28~29일 댄싱공연장에서 출발해 30km, 20km, 10km, 5km 코스 중 선택한 코스를 걷는다.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대만, 미국 등 20여 개국의 참가가 예정됐다. 내달 13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걷기 운동 보급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걷기연맹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지원하는 대회"라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한중 우호 협력 본격화 기회

-시진핑,관계 개선 의지... 강원수출 회복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방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관계 개선이 기대됩니다. 특히 시주석은 한 총리와 양자 면담에서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방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중관계 회복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원 기업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방안 논의가 양국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역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한중 사이에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윤대통령은 지난 4월 양안 갈등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긴장감이 지속됐습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3각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 전망은 밝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주석방한이 성사된다면, 한중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국입니다. 올해 1~7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과 총수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은 각각 20.9%와 19.6%였습니다. 같은 기간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약 4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은 14개월째 줄어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월 강원지역 중국수출액은 198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만달러 12.7% 감소했습니다. 강원지역 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화장품과 의료용 전자기기도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42.1%, 41.7%씩 줄었습니다.

대중관계 회복조짐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시주석이 한국을 찾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로선 연내 방한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시주석방한을 내년쯤으로 보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주석의 방한 시기보다 양국간의 우호분위기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한중관계는 동북아안보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자원순환세’ 법제화 실효거둬야

-폐기물 연료 쓰는 시멘트공장 대응책 6개시군협 반드시 관철을

시멘트공장 가동 연료로 쓰는 폐기물에 ‘자원순환세’를 부과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 6개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강릉·동해·삼척·영월 도내 4개 시군과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은 최근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오는 11월 자원순환세 도입을 목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6개 시군 57만여명의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산업은 효율성과 기능성을 무기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기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이자 고온에서 제조된 탓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공해물질 배출이 타 산업에 비해 높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두통거리가 됐습니다. 근래엔 폐타이어·폐목재·오니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그 양이 확대되면서 유해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유발하는 공해 물질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 우려 문제는 이미 진즉에 제기됐습니다. 1991년 ‘한국역학회:시멘트 분진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장해에 대한 조사-환경성 천식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

사(정해관·김정순)’를 시작으로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에게서의 진폐증 집단 발생 사례보고(임종한 등, 2010)’ 그리고 2013년의 의학박사학위논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폐환기장애 위험요인들의 기여위험도(문선인)’ 등 30년간 지속되는 고질적인 사안이 됐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때 배상 문제가 뜨겁게 거론된 적이 있지만,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운 특성이 있어 구제책이나 보호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와 전문병원 설립으로 유질환자치료, 사후관리 등 보건복지사업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기적 중금속 검사와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수목 식재 등 다양한 환경 개선이 강구돼야 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오염원인을 제공한 폐기물 배출자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세당위성은 있으나 법제화에 성공하려면 추진 작업이 치밀해야 합니다. 이전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운용 방안을 연구했다가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한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긴 추석 연휴, 복지 사각지대·돌봄 공백 없어야

홀몸 어르신·노숙인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후원금에 이어 자원봉사자까지 줄어들자 그동안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었던 일부 급식소가 올해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급식소를 이용하던 소외계층이 긴 추석 연휴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무료급식소의 처지가 이만저만하지 않다. 하루하루 내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무료급식소마다 후원금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50%가량 적어졌다고 한다. 무료급식소를 찾아온 이들이 배고픔을 안고 돌아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급식 반찬 부실은 말할 것도 없다. 무료급식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당장 기업이나 통 큰 후원자를 확보하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빈곤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빈부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8번째로 크며 고령층 빈곤은 세계 1위다.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생활고 사망 비극은 경제대국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빈부 격차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자체 등에서는 취약계층에 과일·간편식품 등 위문 물품을 지급하고 연휴 기간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상시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도 곤궁한 삶을 이어 가거나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어려운 이가 많아 여전히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무료급식소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탑을 쌓을 수 있다. 무료급식소를 돕는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정부도 기업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지원을 물가상승분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도 시급하다.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져 명절도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탓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모두가 함께 맞는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26일 (화)

사설/칼럼 19면

전문대학 생존, 과감한 구조조정·특성화에 달려

전문대학의 역할은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기술 직업군을 육성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2중대가 결코 아니다. 그런 전문대학이 요즘 위기에 처해 있다. 태백 소재 강원관광대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전문대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2의 강원관광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시모집 마감을 11일 앞둔 24일 오후 현재 강원자치도 내 7개 전문대 중 접수 현황을 공개한 일부 대

학의 경쟁률이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0.82대1에서 1.46대1 사이에서 형성돼 미달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간호·보건계열 등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와 경우 전형에 따라 높게는 20대1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속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7조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규정하고 있다. 4년제 일반대학과는 교육 목적부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은 학문 연구보다는 실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결국 취

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대학을 나온 졸업생도 전문대학으로 다시 유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정부의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4년제 일반대 지원액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차별이 뚜렷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의 최근 3년간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2019년

12조6,000억원, 2020년 13조7,000억원(8.9%), 2021년 15조원(9.3%)이 지원됐다. 물론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늘어났다. 2019년 1조6,200억원,

학령인구 갈수록 감소, 살아남기 힘들어

강원관광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도내 7개 대 수시모집 미달 사태 우려

2020년 1조7,300억원, 2021년 1조7,000억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총액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2.6%, 2021년 11.3%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대학의 총재정 규모가 일반대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총재정 규모는 평균 5조1,600억원으로 일반대 평균(22조8,000억원)의 22.6%에 불과했다. 정부가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문대학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특성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현실에 살아남기가 힘들다.